산업계, 성과급 논란에 커지는 갈등 불씨… 노조 힘 커지나

SK하이닉스 성과급 불만에 기술사무직 노조 가입 늘어

삼성 8개 계열사노조 뭉쳐 정년보장 등 공동교섭 요구

일각선 '불만 과장' 목소리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2021년 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이 노동조합 동참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노조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사내 게시판 등에는 사측에 대한 불만과 항의를 드러내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사측이 성과급 불만에 최태원 회장 연봉 반납과 복지포인트 지급 등 대책을 내놨지만, 성과급 규모만이 문제가 아니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새로운 임금 제도인 '셀프 디자인'과 인사 제도 등이 주요 사항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기술사무직 노조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었다. 이는 한국노총 소속 전임직 노조가 아닌, 기술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민주노총 소속 신규 노조를 말한다. 그동안 조합원 수가 1000여 명에 불과할만큼 소규모였지만, 이번일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는 전언이다. 셀프디자인과 관련한 법적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노조도 조합원 확대에 적극 나섰다. 일부 요구에 따라 3만원이었던 월 회비를 2만원으로 인하한 것. 일부 직원들은 소액을 기부하는 사내 프로그램 대신 노조에 가입하는 행렬도 이어졌다.

8일에는 관련한 입장문도 밝혔다.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셀프디자인이 논의 대상에서조차 포함되지 못하고 기술사무직 노조도 소통에서 배제됐다며, 이번 사태 본질이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라고 강조하는 내용이다.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노조 관계자는 "이번 일로 구성원을 투명하지 않게 대해왔던 관행에 불만이 터진 것"이라며 "노조에 대한 반감이 사라지고 가입자 수도 상당히 늘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은 자회사인 SK텔레콤으로도 번졌다. SK텔레콤 노조가 사측에 성과급 규모를 재고해야 한다는 항의 서한을 보낸 것. 결국 사측이 성과급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고 합의에 성공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SK그룹만이 아니다. 삼성전자 등 삼성 8개 계열사의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지난 8일 사측에 성과급(OPI) 제도 투명화를 비롯해 평가 제도와 정년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이들 노조는 앞으로 각사별로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공동 교섭을 관철할 예정이다.

내부에서는 아직 SK하이닉스만큼 반향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은 노조측 주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앞서 실적이 아무리 높아도 OPI는 연봉의 최대 50% 수준에 불과하고 사업부와 계열사 별로 지나치게 큰 성과급 격차와 모호한 기준 등에 불만이 적지 않았던 만큼, 한동안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LG에너지 솔루션 노조 역시 다른 LG화학 사업부보다 크게 낮은 성과급에 항의를 전달하기도 했다.

단, 일각에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온라인 게시판 등으로 의견 개진이 자유로워지면서 실제 불만보다 과장됐다고 보고 있다. 여전히 대부분 직원들은 크게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있지만, 노조 등 일부가 나서면서 전체 분위기로 오인됐다는 것.

실제로 이번 일로 노조 가입자가 많이 늘긴 했지만, 전체 직원 비율로 보면 여전히 일부라는 설명이다. 사측이 소통에 나서거나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나친 항의에 대한 자성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과급과 인사제도에 대한 불만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성과급과 인사제도는 법적으로 특별한 기준이 없는 사기업의 고유 권한으로, 오히려 직원들에 혜택을 주려다가 일부 이견에 반발이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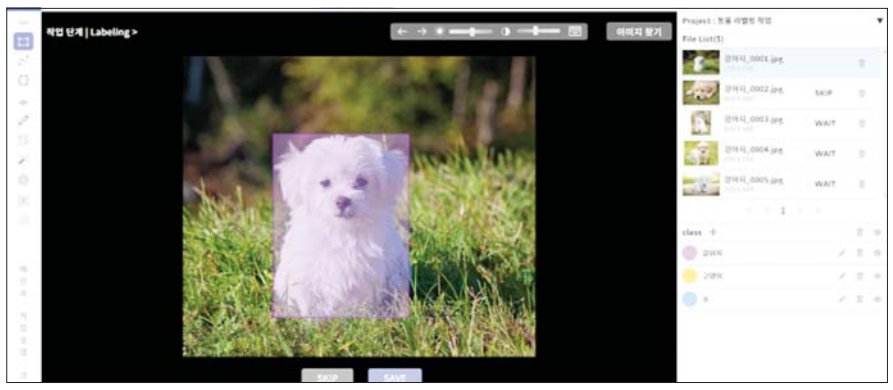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B2G사업 잡아라"… AI 기업 수주 총력전

〈기업-정부간 거래〉

정부, AI 바우처 사업 대규모 투자 매출 집계되고 솔루션 공급 매력

플리토·아크릴 등 사업 잇단 수주 데이터 가공기업 티벨도 사업 참여


강아지 사진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라벨링하는 모습. /티벨

인공지능(AI)·데이터 기업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B2G(기업·정부간) 사업에 사활을 걸고, 정부의 AI 바우처 및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플리토·아크릴·디에스랩글로벌 등 AI 및 데이터 기업들은 과제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되는 AI 바우처 사업을 수주했으며, 엠티콤 등은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되는 데이터바우처 사업을 따냈다.

지난해 AI 분야에서 관련 기업들이 B2B 영업은 저조한 실적을 보였던 반면,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 수주로 B2G 사업에서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AI 바우처 사업은 매출로 집계되지 않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과 달리 매출로 집계되고, 주력 제품인 AI 및 데이터 가공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올 AI 바우처 지원 사업 규모는 560억원. AI 바우처 공급기업들은 내달 2일까지 수요 기업 모집에 나서고 있다.

언어 데이터 기업 플리토는 수요 기업에 번역 API(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 솔루션이나 번역 엔진 구축을 지원하는 AI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으로 참여한다. 플리토는 번역 서비스 플랫폼에서 일반인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해 AI 번역 엔진을 개발했다.

플리토 이정수 대표는 "글로벌 시장 확대와 고객 편의를 위해 실시간 번역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며 "AI 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참여해 수요기업의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국내외 빅테크 기업과 협업하며 키워온 플리토의 역량과 AI 번역 솔루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I 기업 아크릴도 '2021년 AI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참여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는 땡큐서울이비인후과의원과 함께 '갑상선암 진단을 예측하는 AI 판독 엔진'으로 AI 바우처 사업을 진행했다.

아크릴 관계자는 "AI 바우처 사업은 수요기업은 최소한의 투자로 AI 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수 있으며, 공급기업은 다양한 산업과 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 강조했다.

AI 및 소셜 로봇 기업인 아카에이아이는 AI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으로 참여, 20종 이상 AI와 API와 교육을 위한 대화 기반 AI 분석 시스템 등을 공급한다. 교육용 AI 소셜 로봇 '뮤지오', AI 커뮤니케이션 엔진 및 분석 플랫폼 API, 특정 데이터 기반 AI 대화 데이터 셋으로 제작한 '바흐' AI 데이터 구축 서비스 총 3가지다.

AI 기업인 디에스랩글로벌도 AI바우처 및 데이터바우처 사업 공급 기업으로 참여, 코딩 없이 AI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릭 AI' 등을 제공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 AI 바우처 사업에서 공급기업으로 참가해 물체인식 AI를 활용해 재활용품 자동 분류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서는 자연어 분류 AI을 활용한 계약서 검토, 드론 영상 기반 화재 예측, 전력량 예측 등 AI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AI 기업인 라이언로켓도 AI 바우처 공급기업으로 AI 영상제작 솔루션을 제공한다. AI 휴먼 영상제작 솔루션은 딥러닝 기반 음성·영상합성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AI 휴먼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데이터 가공기업인 티벨도 AI 바우처 및 데이터 바우처 공급업체로 참여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 데이터 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참여해 마이크로(μ) 단위의 렌즈 이미지 전처리 및 렌즈 지름과 배열의 거리 가공, 사람의 어깨 각도에 따른 여러 상태의 이미지 가공 등을 진행했다.

AI플랫폼 기업인 엔쓰리엔클라우드는 공급기업으로 AI 바우처 사업을 통해 쉽게 AI 개발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치타' 플랫폼을 제공한다. 치타는 AI 모델을 만들고 바로 API 형태로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AI 기업인 스켈터랩스도 AI 바우처 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참여해, 대화형 AI 및 개인화 AI 솔루션을 제공한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

"잘못 송금한 돈 예보가 대신 받아드려요"

금융위, 예금자 보호수준 개선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오는 7월 6일부터 잘못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반환 지원 신청 대상은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다. 시중은행부터 토스, 카카오페이까지 금전을 잘못 보냈다면 모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의 위임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겼다.

개정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그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에 토스, 카카오 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 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는 신청이 제한된다.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SNS회원간 송금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예보 내에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추후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은행 오프라인 점포 문 닫기 어려워진다

금감원, 영업점 폐쇄 공동절차 개정

디지털 취약계층 많으면 유지 검토

앞으로는 은행이 오프라인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의 유지하거나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은행이 점포 신설·폐쇄 관련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 점포감소로 인해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 같은 시장규율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점포수는 지난 2015년 7281개에서 2017년 7101개, 2019년 6709개, 2020년 6406개로 꾸준히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점포 감소에 따라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할 때 사전절차를 강화한다.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선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한다. 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